

아일랜드 은행위기의 전개과정과 전망

- ◆ 2008년 이후 부동산시장의 버블붕괴 여파로 은행 부실화가 심화되자 아일랜드 정부는 2009년초부터 자산관리공사 설립을 통한 부실채권 매입, 부실은행 국유화 등 은행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
- ◆ 그러나 막대한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재정수지가 악화되어 시장 신뢰가 하락한 데다 10월말 EU 정상회의가 민간투자자들의 손실분담 원칙을 제시하자 디폴트 가능성이 높은 아일랜드 국채의 기피현상이 확산되고 은행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
- ◆ 이에 아일랜드 정부는 11.21일 EU 및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함으로써 은행위기는 일단 진정국면에 들어섰으나 구제금융에 대한 국민적 반감, 정정불안 등이 위기해결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
- ◆ 앞으로 EU가 손실분담 원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EMU 체제 개혁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 국가의 위기와 금융시장 불안이 다시 표면화될 가능성

1. 아일랜드 은행위기의 전개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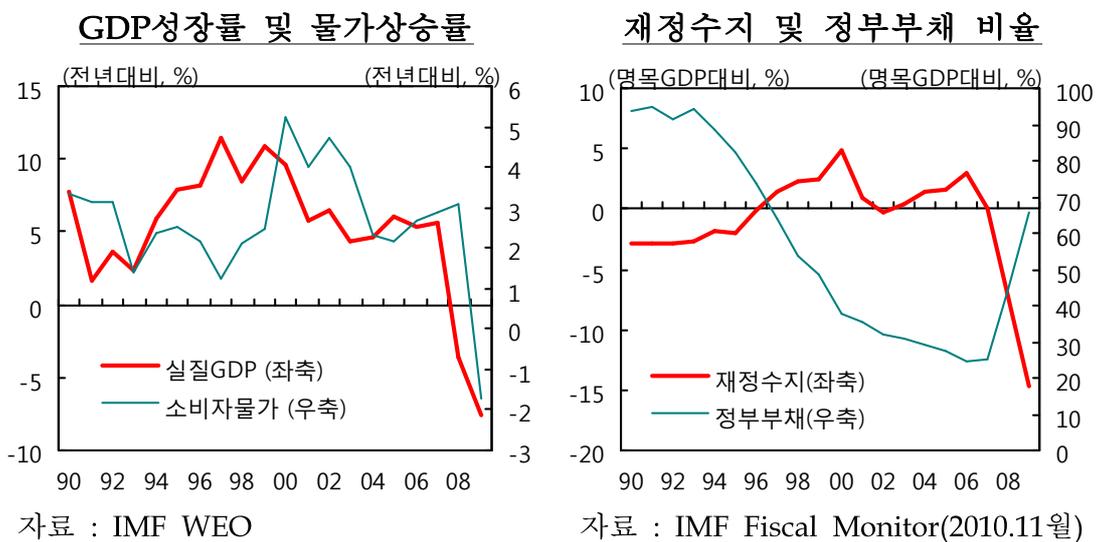
(2008년 이후 부동산시장의 버블 붕괴로 은행부실 심화)

-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일랜드 경제는 낮은 법인세율과 저임금 등에 힘입어 외국인투자가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IT 붐, 부동산 경기호황이 이어지면서 높은 성장세를 지속

- 1995~2007년중 GDP 성장률(연평균)은 7.3%, 소비자물가상승률(연평균)은 3.0%를 기록하였으며 같은 기간중 실업률은 12.2%에서 4.6%로 하락함으로써 유럽의 새로운 強小國*으로 부상

* 시장에서는 아일랜드를 Celtic Tiger로 호칭

- 또한 아일랜드는 1997~2007년중 재정흑자를 기록하였고 정부부채 비율도 25%(2007년)에 불과하여 재정건전성이 양호



- 특히 2003~2005년에는 주택건설투자의 성장 기여율이 30% 가까이 상승하면서 경제성장을 주도

아일랜드 주택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

	(전년대비,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경제성장률(A)	6.5	4.4	4.6	6.0	5.3	5.6	-3.5	-7.6
(주택건설투자)	3.5	12.7	11.1	16.6	2.6	-6.4	-22.0	-41.0
■ 기여도(B, %p)	0.3	1.2	1.1	1.8	0.3	-0.7	-2.3	-3.4
■ 기여율(B/A, %)	5.2	27.5	24.9	30.1	5.9	-13.2	64.5	45.4

자료 : 아일랜드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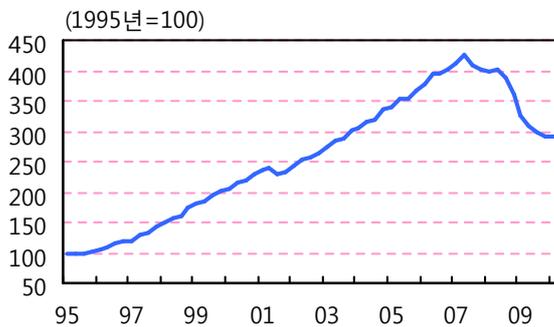
□ 그러나 2008년 이후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면서 아일랜드는 극심한 경기침체를 경험

○ 부동산가격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줄곧 상승세를 지속하다가 2008년부터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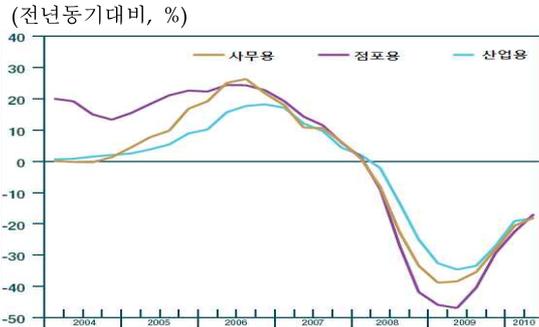
— 주택가격(신축)은 1995.2/4분기~2007.2/4분기중 4배 이상 상승한 후 2010.1/4분기 현재 정점대비 31.8% 하락

— 상업용 부동산가격은 2009년 들어 최고 50% 가까이 급락

주택가격 변동 추이



상업용 부동산가격 변동 추이



자료 : Permanent tsb/ESRI(주택가격), SCS/IPD(상업용 부동산가격)

⇒ 부동산 버블 붕괴의 여파와 세계교역 감소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아일랜드 경제는 2008년 -3.5%, 2009년 -7.6%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유로존 국가중 가장 나쁜 성적임*

* 아일랜드는 2010년중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3개국 (OECD 전망: 스페인 -0.2%, 그리스 -3.9%, 아일랜드 -0.3%) 가운데 하나

아일랜드와 유로지역의 경제성장률 비교(%)

	2007	2008	2009
■ 아일랜드	5.6	-3.5	-7.6
■ 유로지역	2.8	0.5	-4.1

□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아일랜드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과 주택모기지 대출의 상당부분이 부실화되어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

○ 2010.9월말 주택모기지의 연체율은 6.6%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주택압류 건수도 급증하는 추세(2009.9월말 331건 → 2010.9월말 522건)

* 아일랜드 중앙은행은 은행의 모기지관련 통계를 2009년 3/4분기부터 편제하기 시작.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인 2007년에는 주택모기지 대출의 연체율이 2009.9월말의 4.1%보다 훨씬 낮았을 것으로 추정

아일랜드 은행의 모기지 연체율 및 압류건수

(기말, 10억유로, %)

	2009		2010		
	3/4	4/4	1/4	2/4	3/4
주택모기지대출 잔액(A)	118.6	118.3	118.1	117.7	117.4
90일이상 연체 대출 잔액(B)	4.8	5.3	6.1	6.9	7.8
연체율(B/A, %)	4.1	4.5	5.2	5.9	6.6
압류건수(건)	331	397	455	495	522

자료 : 아일랜드 중앙은행

(아일랜드 정부는 선제적으로 은행산업 구조조정을 단행)

□ 일부 남유럽국가와 함께 아일랜드 경제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악화되기 시작하자 2008년말부터 아일랜드 정부는 선제적인 조치를 단행

○ 구조조정에 앞서 금융시장의 동요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금보호제도(Credit Institutions Financial Support Scheme 2008)를 새로이 도입(2008.12월)하여 예금을 전액 보장

— 2009.12월부터는 10만유로 이하 예금을 영구적으로 전액보장(Deposit Guarantee Scheme)하고 10만유로 초과 예금 및 선순위 채권 등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지급을 보장(ELG : Eligible Liability Guarantee)*

* ELG 제도는 당초 금년말이 시한이었으나 금융불안이 심화되자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2010.11.10일)

- 은행이 보유한 부동산 관련 부실자산 정리를 위해 자산관리공사(NAMA: National Asset Management Agency)를 설립(2009.11월)하고 부실은행의 대출채권을 할인된 가격에 매입한 후 정부보증채를 대가로 지급
 - 2010년 3~5월중 153억유로(장부가 기준)의 부실자산을 50% 할인된 가격에 매입하는 등 2011년 2월까지 총 810억유로(장부가액)의 자산을 매입할 계획
- 부실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국유화
 - 부실정도가 가장 심한 Anglo Irish Bank에 230억유로를 투입하여 완전 국유화(2009.1월)
 - Allied Irish Bank* 및 Bank of Ireland**에 각각 35억유로씩, Irish Nationwide Building Society에 27억유로를 투입
 - * 현재 정부는 18.6%의 지분을 보유하여 최대주주인데 앞으로 54억유로를 더 투입하여 지분율을 90%대까지 높일 예정
 - ** 정부지분 36%

아일랜드 부실은행 공적자금 지원 계획

(억유로)

	기지원액	최종지원	비 고
Anglo Irish Bank	230 ¹⁾	293	필요시 50억유로 추가
Bank of Ireland	35	-	-
Allied Irish Bank	35 ¹⁾	54	필요시 18억유로 추가
Irish Nationwide Building Society	27	54	-
EBS Building Society	1	2.5	필요시 5.3억유로 추가

주 : 1) FT 기준
 자료 : FT, Reuters 등을 종합

⇒ 이러한 조치 등에 힘입어 아일랜드 은행(Allied Irish Bank, Bank of Ireland의 2개 은행)은 2010. 7월 유럽은행감독위원회가 실시한 EU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

□ 그러나 공적자금 투입의 후유증으로 아일랜드의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나고 정부부채 비율도 상승

- 재정적자비율은 2009년중 -14.6%, 2010년중 -31.9%(예상)로서 EU 기준치(-3%)의 10배를 상회하고 정부부채비율도 금년말 99.4%까지 상승할 전망

아일랜드의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비율

	(GDP 대비, %)			
	2007	2008	2009	2010 ^{f)}
재정적자	0.1	-7.3	-14.6	-31.9
정부부채	25.0	44.4	65.5	99.4

자료 : IMF Fiscal Monitor(2010.11월)

(그리스 사태의 수습으로 진정기미를 보이던 아일랜드 문제는 금년 9월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주요 이슈로 재부각)

□ 그리스의 국가부도 위기가 고조되던 금년 5월까지 아일랜드도 PIIGS 국가의 하나로 취급되어 국채금리와 CDS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음

□ 그러다 EU와 IMF의 지원으로 하반기부터 그리스 사태가 진정국면에 들어서자 아일랜드도 안정을 되찾는 듯하였으나 금년 9월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주요 이슈로 再부각

- 금년 하반기에 S&P 등 신용평가기관들이 아일랜드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자 시장에서는 아일랜드 국채 기피현상이 확산

* 부실금융기관 지원에 따라 아일랜드의 재정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

아일랜드의 국가신용등급 하락

	Moody's	S&P	Fitch
	Aaa(98.5.4)	AAA(01.10.3)	AAA(98.12.16)
2009년	Aa1(7.2, -1단계)	AA+(3.30, -1단계) AA(6.8, -1단계)	AA+(3.8, -1단계) AA-(11.4, -2단계)
2010년 ¹⁾	Aa2(7.19, -1단계)	AA-(8.24, -1단계) A(11.23, -2단계)	A+(10.6, -1단계)

주 : 1) 현재 신용등급 전망은 모두 '부정적(Nega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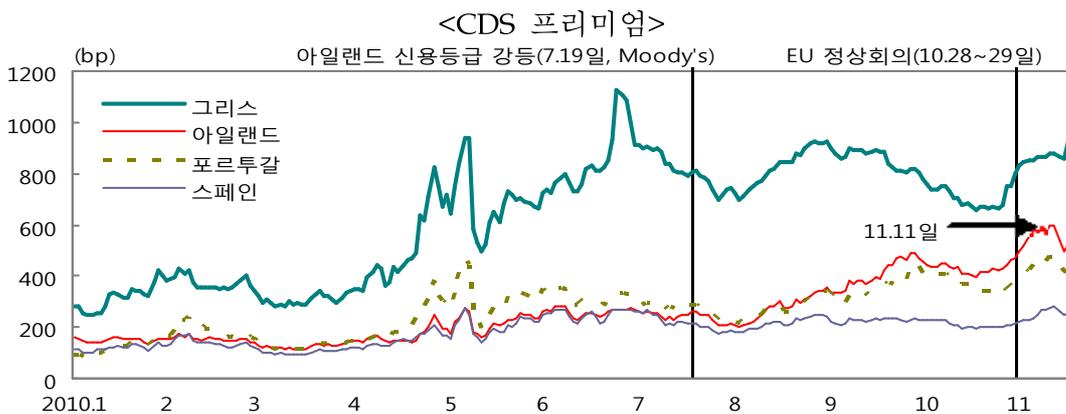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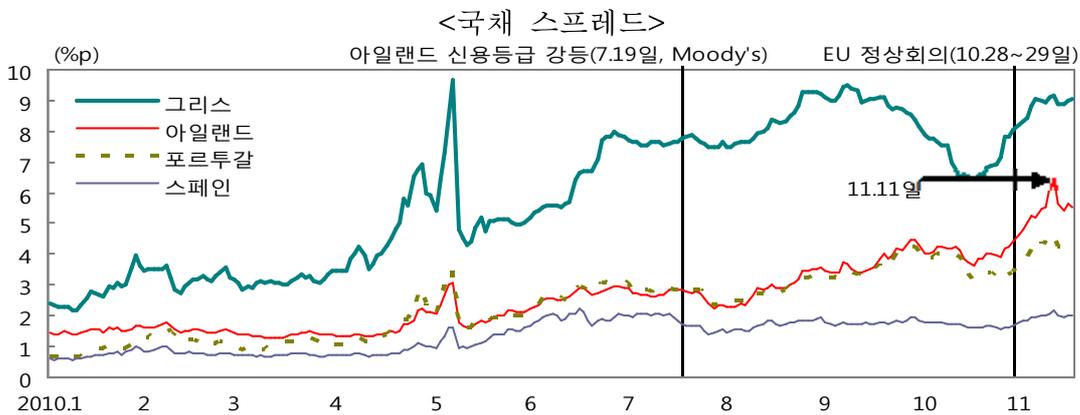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 이러한 상황에서 10.28~29일 EU 정상회의에 보고된 “EU 경제적 거버넌스 개혁방안”에 국가디폴트(채무조정)시 민간투자자들도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는 방안이 포함되자 투자자들은 디폴트 가능성이 높은 아일랜드 국채를 투매

⇒ 국채수익률과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면서 아일랜드 은행들은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됨

* 11.11일 국채수익률은 8.9%로 유로화 출범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

국채 스프레드¹⁾ 및 CDS 프리미엄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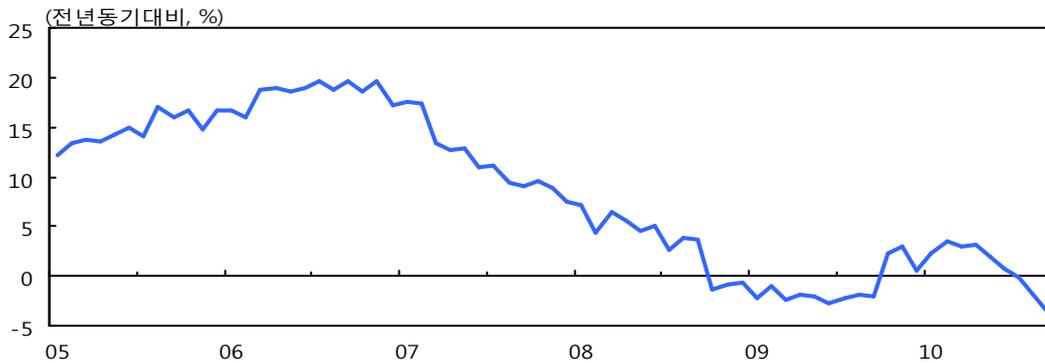
주 : 1) 10년 만기 기준. 독일 연방채 대비 2) 5년 만기 기준
자료 : Bloomberg

- 또한 기업을 중심으로 거액예금의 인출이 늘어나 아일랜드 은행들의 자금압박은 더욱 가중

- o 1~10월중 Allied Irish Bank에서 130억유로의 기관 및 기업예금이, 9월 이후 Bank of Ireland에서 100억유로(전체예금의 약 12%)의 기업예금이, 8~9월중 Irish Life & Permanent에서 60억유로(전체예금의 약 11%)의 예금이 각각 인출

⇒ 전체 은행예금은 금년 6월 이후 전년동기대비 감소로 전환

아일랜드의 은행 예금 증감율



자료 : 아일랜드 중앙은행

- 이에 따라 아일랜드 은행의 ECB 차입 의존도는 계속 높아져 금년 10월말 현재 ECB 차입잔액은 1,300억유로로서 PIIGS 국가중 최고를 기록(ECB의 對유로존 대출에서 차지하는 아일랜드 비중은 24.3%, 아일랜드의 유로지역 GDP 비중은 1.8%)

유로존 금융기관의 대 ECB 차입규모

(말잔 기준, 억유로)

	2006	2007	2008	2009	2010.7월	8월	9월	10월
ECB 대출	4,505	6,372	8,432	7,499	6,325	5,905	5,925	5,341
아일랜드	270	394	886	920	895	951	1,191	1,300
스페인	218	714	926	901	1,418	1,190	753	693
포르투갈	2	25	102	161	488	491	403	..

자료 : ECB, 각국 중앙은행

- o ECB의 차입한도를 모두 소진한 일부 은행들은 아일랜드 중앙은행으로부터 긴급유동성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짐*

* Allied Irish Bank 등은 9~10월중 아일랜드 중앙은행의 긴급유동성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약 200억유로를 지원받음

(아일랜드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 결정)

□ 10월말 EU 정상회의 이후 아일랜드의 국채수익률이 급등하자 EU, ECB, 독일 등은 구제금융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아일랜드 정부는 이를 거부

○ 이는 재정상황이 그리 나쁘지 않다는 자체 판단*, 구제금융 조건(현재 12.5%인 법인세율의 인상**, 추가재정긴축 등)에 대한 우려, 경제주권 침해를 거부하는 국민들의 정서*** 등에 기인

* 정부부채비율이 상승(2009년 65.5%)하였으나 아직도 EU 기준인 60%를 소폭 상회하는 데 그침

** 아일랜드는 다른 나라들보다 낮은 법인세율이 세계적인 기업들을 유치한 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 아일랜드는 2009.10월 리스본 조약에 대한 국민투표시 EU로부터 조세주권을 침해받지 않겠다는 공약을 전제로 이를 가결시킬 정도로 법인세 인상 문제에 민감. 반면 독일, 프랑스 등은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이 낮아 자국의 투자유치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이유로 법인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

*** 아일랜드는 20세기초까지 700여년 동안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국가주권의 침해에 민감하게 반응

○ FT는 “아일랜드 사람들은 유머에 능숙한데 ‘아일랜드 은행들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Lenihan 재무장관의 발언이야말로 가장 멋진 유머”라고 비판*

* Threat from bank funding constraints(FT, 11.17일)

□ 그러나 은행들의 자금조달이 사실상 어려워진 가운데 EU 재무장관 회의(11.16~17일)의 결정으로 IMF·EU·ECB 공동 대표단이 11.18일 더블린에 파견되어 구제금융 필요성 여부를 실사하자 아일랜드 정부도 입장을 바꿔 11.21일 구제금융을 공식 요청

○ 구제금융의 규모* 및 기간, 조건 등 구체적 내용이 정해지려면 앞으로 수주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

* Lenihan 재무장관은 1,000억유로를 넘지는 않을 것(금융시장에서는 약 800억~900억유로 예상)이라고 언급

— 구제금융은 EU의 유럽금융안정기금(EFSF, 4,400억유로), EU 자체 기금, IMF 자금, 영국·스웨덴의 대출* 등으로 구성될 예정

* 아일랜드 은행에 대한 익스포져가 큰 영국은 70~90억파운드(111억달러), 스웨덴은 100억SKr(15억달러)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 한편 영국의 입장에서 아일랜드는 주요 수출시장이기 때문에 아일랜드 경제를 희생시킬 필요성이 높음(2009년중 영국의 전체 수출에서 아일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6.9%로서 BRICs 전체(5.3%)보다 높음)

PIGS 국가에 대한 각국 은행의 익스포져

	아일랜드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합 계	731.2	175.4	234.8	876.5
영 국	148.5	12.0	22.4	110.8
독 일	138.6	36.8	37.2	181.6
미 국	68.7	7.5	3.2	47.1
프랑스	50.1	53.5	41.9	162.4
이탈리아	15.3	5.3	4.7	25.6

주 : 2010년 2/4분기말 기준
 자료 : BIS

— 구제금융 조건으로는 은행의 구조조정* 및 재정적자 축소 등이 포함** 될 것으로 보임

* Cowen 아일랜드 총리는 아일랜드 은행들이 자생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해외자산의 매각, 구조조정 등을 통해 규모를 축소할 것이라고 언급

** FT는 은행의 해외부문 매각, 재정지출 추가 삭감, 공무원 임금 삭감, 최저임금 인하, 부가세율 인상, 은행자본금 확충 등이 지원조건이 될 것이라고 보도. 그러나 아일랜드 경제정책의 근간이 되는 낮은 법인세율의 인상은 쉽지 않을 전망

2. 평가 및 전망

- 최근 발생한 아일랜드 사태는 '은행 부실에서 시작된 위기(banking crisis)'로서 국가부도(sovareign debt default) 위험에 처했던 그리스와는 차이가 있음
- 공공부문 외채비중(총외채대비)은 그리스가 약 65%인 반면 아일랜드는 8.4%에 불과

아일랜드의 총외채 규모

(기말, 억달러)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2/4
총 대 외 부 채	10,521 (100.0)	13,362 (100.0)	17,631 (100.0)	22,674 (100.0)	23,556 (100.0)	23,847 (100.0)	21,313 (100.0)
■ 공공 부문	442 (4.2)	373 (2.8)	394 (2.2)	454 (2.0)	1,422 (6.0)	1,854 (7.8)	1,788 (8.4)
정 부	349 (3.3)	318 (2.4)	359 (2.0)	444 (2.0)	803 (3.4)	1,083 (4.5)	982 (4.6)
■ 민간 부문	10,079 (95.8)	12,989 (97.2)	17,237 (97.8)	22,220 (98.0)	22,134 (94.0)	21,993 (92.2)	19,525 (91.6)
은 행	5,441 (51.7)	6,565 (49.1)	8,888 (50.4)	11,449 (50.5)	10,685 (45.4)	9,524 (39.9)	8,241 (38.7)

주 : ()내는 비중, 자료 : World Bank

- 또한 그리스 사태 때와는 달리 유럽금융안정기금(EFSF)이라는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데다 IMF와의 합동지원 경험*도 있어 아일랜드 은행위기는 점차 진정국면에 들어서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

* 그리스의 구제금융지원 결정에는 6개월이 소요되었으나 이번에는 협상단 파견 후 4일만에 신속히 마무리

- 다만 실물경제의 회복지연, 구제금융 지원조건을 둘러싼 논란, 정치적 불안정 등 아일랜드 내부적인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는 있음

- IMF는 아일랜드 경제 성장률이 2010년 -0.3%에서 2011년 2.3%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World Economic Outlook, 2010.10)하였으나 추가 재정긴축이 이루어질 경우 성장률 전망이 하향조정될 가능성
 - 아일랜드 정부는 2011~2014년의 4년간 재정적자를 150억유로 (GDP대비 9.4%) 개선하는 내용의 '과다적자시정조치(EDP: Excessive Deficit Procedure) 세부 계획'을 11월말까지 확정하고 12.7일 의회에서 2011년 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나 통과여부가 불확실
 - 법인세율의 인상 문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어서 이를 국민들이 수용할 것인지 불투명
 - 구제금융의 책임소재를 놓고 연정이 붕괴*되고 조기총선이 치러질 경우 정치적인 혼란 발생 가능성
- * 공화당(Fianna Fáil)의 연정상대방인 녹색당(Green Party)은 2011년도 예산안 통과 이후 내년초에 연정탈퇴 계획을 발표하면서 조기 총선 실시를 주장(11.22일)

향후 아일랜드의 주요 일정

날 짜	주요 일정
11.25일	의회 보궐선거
30일	4년간(2011~14년) 150억유로(세수 증대 50억유로, 재정지출 감축 100억유로) 재정수지 개선*을 위한 세부 계획 발표 * 재정적자 비율 : 2011년 -10.0% → 2012년 -7.2% → 2013년 -4.9% → 2014년 -2.9%로 감축을 목표
12.7일	2011년 예산안 표결
2011년 초	아일랜드 의회는 금년 11월에 발표될 재정수지 개선 조치 관련 법안 표결

자료 : Reuters

- 현재 금융시장의 관심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아일랜드보다는 다음 구제금융 대상이 어느 나라가 될 것인지로 이동
 - 이번의 구제금융 지원은 아일랜드 위기가 유로존의 취약국으로 전파되어 EMU 체제가 동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였으나 위기전염 우려는 지속되고 있음
- ⇒ 이를 반영하여 구제금융 결정을 전후하여 잠시 안정되었던 유럽의 금융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모습

아일랜드의 구제금융을 전후한 시장지표

	11.17	18	19	22	23
유로화 환율(달러/유로)	1.3518	1.3644	1.3684	1.3625	1.3371
주가지수(Euro Stoxx)	2802.7	2855.2	2845.8	2811.4	2739.4
아일랜드 10년 만기 국채수익률(%)	8.1	8.1	8.1	8.1	8.4

- 아일랜드 사태가 10월 이후 갑자기 악화된 직접적 원인이 EU가 EMU 체제 개혁방안*을 추진하면서 민간 투자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책임분담 원칙'을 확립한 데 있기 때문에
- 이러한 원칙을 구체화시켜가는 과정에서 특정 국가의 위기와 금융시장 불안이 재연될 소지가 있음

* 2011년 여름까지 재정규율 및 거시경제 감시 강화를 추진하고 2013년 중반까지 손실분담을 포함하는 '영구적 위기관리메커니즘'을 도입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해외경제포커스 46호> "EU의 경제적 거버넌스 개혁방안과 전망 (2010.11.7~13)" 참조

- '책임분담 원칙'은 독일이 주도한 것으로서 그리스, 아일랜드와 같은 주변국가 지원에 반감을 갖는 국내 납세자들을 의식한 것이나 이 원칙이 EMU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음
- ⇒ 개혁안을 추진하려는 '정치적 동력(political initiative)'과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금융시장의 힘(market force)' 사이에 전개될 다이내믹스(dynamics)가 향후 유럽발 금융불안의 재연 여부를 가늠할 주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